

신뢰도 추락한 野… 내각 후보자 의혹 공세에도 ‘역부족’

장관 후보자들, ‘버티기’ 돌입
정권 초 지지율 타격 크지 않아

野, 낙마 목표 검증수위 높였지만
역검증 당하거나 지지 못받아
‘도로 친운당·영남 지역당’ 전략

‘갑질 의혹’·‘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나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정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기에 나서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선 패배 이후 신뢰도가 추락한 제1야당이 펼치는 공세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를 마쳤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의 고발장을 들어보고 있다. /뉴시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16일 열렸지만, 학계는 이 후보자가 입각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한 법학계 국민 검증단의 유원준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을 했다고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자기의

논문인 것처럼 그 학술지에 게재하는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나오고 당 안팎과 시민사회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종 의혹에도 정권 초 지지율에 타격이 크지 않은 것도 후보들이 버티기에 나설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주 연속 상승하며 64.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에 정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6.2%로 전주보다 2.4%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대비 4.5%포인트 하락한 24.3%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낮은 지지도로 보였던 지난 2020년 5월 3주차(24.8%)보다 낮은 최저치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0\%$ 포인트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응답률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각종 의혹을 들춰내며 낙마를 목표로 검증 수위를 높

이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에게 ‘역검증’을 당하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선 패배 이후 등 각종 논란에 시달리며 ‘도로 친운(친윤석열)당’·‘영남 지역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자체의 메시지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적 의혹을 받는 후보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대야관계 속에서 최대한 작은 걸 내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며 “이전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 7개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기준도 없다.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보겠다는 건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충성심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선, 강선우·이진숙 후보자가 문제가 많지만, ‘국민의힘 내란 세력보다는 낫다’는 사고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 60% 이상이 날 지지하니까, 대통령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생현안 필요 후속입법” vs “확장재정 정책 진행”

〈정청래 민주당 의원〉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민생·경제 회복, 경제성장 해법 구상
정청래 “정부 정책 뒷받침 역할 집중”
박찬대 “첨단산업으로 구조 대전환”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6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책과 경제 성장 해법을 두고 자신만의 구상을 밝혔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책과 경제 성장 해법은 당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당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첫번째 원칙은 당이 이 부

분은 먼저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리고 당·정·대(정당·정부·대통령실)가 충분히 조율한 상태에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국회에서 입법할 것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아마 이 대통령께서 축하 전화를 하실 것”이라며 “그러면 바로 면담을 신청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로드맵을 짠 것을 놓고 민생 현안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후속 입법을 제가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이 발행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로 4개월 안에 소비 진작을 해서 돈

이 돌기 위해 이를 먼저 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가총액이 360조원인 등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도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이 위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에 필요한 입법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후보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의 부정적 영향을 씻어내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생은 폭망하고 경제도 후퇴했다”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떤 민생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박 후보는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빠른 집행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단순한 수요주도나 건설업 중심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의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제조업 강국으로 추격 경제를 해나갔지만, 앞으로는 기술 기반의 선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조직과 산업 체제를



정청래·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해 국회에서 입법, 예산, 재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홍 기자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스스로 거취 밝혀라”

윤희숙 혁신위원장 ‘1차 인적쇄신안’ 당 전원 계파활동 금지 서약서 요구

윤희숙 혁신위원장(사진)이 16일 1차 인적쇄신안을 밝히며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으로서 1차 인적쇄신안과 함께 당 의원 전원이 계파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에 이 자리



에서 이 지경에 오기까지 책임 있는 분들에게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며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워지는 첫 단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일요일 이후에 3일 동안 당의 모습을 봤을 때 사과하는 분은 없었고, 사과는 커녕 ‘사과할 필요 없다’, ‘인적 쇄신 필요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된 단절을 해달라는 당원

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가까이 붙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며 “이것은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의 안방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 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다수 참석했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일었다.

윤 위원장은 “그 자리에 갔던 의원에게 질문한다. 의원님게 계엄은 계몽인가. 추억인가”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산업현장 폭염안전 기본수칙 시행여부 확인”

▶▶ 1면 ‘김병기 “물가안정…”’서 계속

간담회에 참석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농식품부는 생육 관리 중심의 적정 생산·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대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초서브허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갖고 “폭염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 선제적인 대응을 해

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가) 관심 사안이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지난 8일을 전후로 농민, 택배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해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택배 없는 날’에 꼭 동참해주시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예진 기자 syj@